

# 주간 통일정세

2015-22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미군 탄저균 반입 우리 민족 전멸시키려는 것”(6/2, 조선중앙통신)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무기를 마구 끌어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를 비호두둔하는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미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한 생화학 전쟁을 목표로 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전 조선 민족을 멸살시켜서라도 저들의 침략 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날강도적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미국이 생화학 전쟁 연습에 날뛰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실험을 감행해도 짹짹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오히려 동족을 모해하고 상전을 비호두둔하는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희대의 민족 반역 무리”라고 험담함.
  - 대변인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과 온 겨레는 신성한 조국강토를 미제의 핵 및 생화학 전쟁시험장으로 내맡긴 박근혜패당과 온갖 불행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 반괴뢰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선동함.
- 북한, 남북관계 파국 책임 남한 정부에 떠넘겨(6/3, 조선중앙통신; 6/4,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와 함께 대북 압박 및 제재와 합동군사 훈련을 벌인 남측에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정치사기극, 여론기만극”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진정 우리와 마주앉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관점과 북남당국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노동신문은 4일 ‘최악의 북남관계는 사대매국노들을 고발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외면할 때 북남관계는 곡절을 겪게 되고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며 나중에는 전쟁이 터지게 된다”고 위협함.

-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방문 때마다 북한의 자위적 핵억제력 폐기를 주장하고 인권문제를 지적한 점을 꼬으면서 “북남관계의 현 사태 발전은 괴뢰집권세력의 사대매국책동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함.
- 북한, 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맹비난…“중착점은 개죽음”(6/4,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전략군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발사시험이 미국 상전의 승인 밑에 미국의 미사일 기술로 미 군부의 뒤받침을 받으며 벌린 꼭두각시 놀음이었다”고 평가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전략군 대변인은 “태안반도의 안흥사격장에서 이번에 벌린 박근혜와 그 일당의 미사일 발사 시험 소동은 외세가 쥐여준 총칼로 동족을 겨누고 달려드는 매국배족적인 반역행위”라고 혈통고, “친미에 젖어있고 숭미에 체질화되고 종미에 환장이 되면 중착점은 개죽음뿐”이라며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함.
  -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핵억제력도, 강위력한 전략로켓도 결코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사는 내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전략군은 일단 선정된 과녁에 대해서는 불바다가 번져지게 할 면적타격에도, 골라가며 소멸할 정밀점 타격에도 빈틈없이 준비됐다”고 위협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이 터지지 않는 것은 전략군 덕분이라고 자랑함.
- 북한, '6·15 공동행사 무산' 남한 책임으로 떠넘겨(6/5, 조선중앙통신)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이하 북측위)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대답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고 있는 괴뢰패당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6·15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남한 정부가 이미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의 변경과 정치성 배제를 강요하면서 공동행사를 파탄시켰다고 비난함.
  - 북측위 대변인은 남한 정부 때문에 “6·15 행사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개최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면서 “진정한 북남관계의 발전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고 고집함.

- 그는 이어 “현 북남관계는 공동선언 이행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같은 사대매국 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전쟁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위협함.
- 북한 조평통 “연평도 불벼락 결코 지나간 일 아니다” 위협(6/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패당은 연평도의 불벼락이 결코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최 의장은 “북한의 기습 도발은 가차없이 응징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미 우리의 불소나기를 맞은 연평도에 나타나 대결 악담을 토해낸 것은 상전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리는 식민지 하수인, 전쟁 머슴꾼의 가소로운 몰골 그대로다”라고 험담함.
  -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등을 거론,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이달에도 북침전쟁열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6·15 앞둔 남북관계 파국 한미연합훈련 때문”(6/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북남관계를 파괴한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이라는 글에서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공동선언 발표 이후 활력 있게 전진하던 남북관계가 현재 대화도 협력도 없는 극도의 파국 상태에 처한 것에 대해 “이는 괴뢰패당이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기 위한 북침전쟁도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림.
  - 신문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열거하며 “북침불장난소동은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함.
  - 신문은 특히 “괴뢰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남조선에 미국의 핵선제

타격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었다”며 “괴뢰집권세력이 각종 모험적인 핵전쟁 도발 각본을 꾸미고 실행을 위해 미쳐날뛰었다”고도 주장함.

- 신문은 “북남 대결상태는 애당초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면서 북침의 불모치를 들고 우리를 해치려 기승을 부린 괴뢰역적패당의 범죄적 망동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도발’, ‘위협’이라고 헐뜯지만 어떤 궤변과 오그랑수로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릴 순 없다”고 강조함.

■ 북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은 생화학전 흉계”(6/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 ‘만천하에 드러난 생화학전 흉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사건은 탄저균을 이용한 악마의 생물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고 전 조선반도를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만천하에 고발한 것”이라고 헐뜯으면서 남한 당국이 미군의 탄저균 반입을 두둔하고 있다며 공범자라고 비난함.
-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자면 미제 침략군을 지체 없이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친미 매국노들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선동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메르스 검역장비 요청...정부 “지원 계획”(6/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북한이 지난 2일 우리정부에 개성공단 출입 인원의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 감지 카메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 대여하는 장비는 남측 근로자가 출입하는 북측 출입사무소와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을 오갈 때 이용하는 출입구에 각각 설치될 것”이라고 말함.

#### ■ 개성공단 北근로자에 ‘메르스 마스크’ 지급한다(6/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지급해달라고 북측이 요청한 것과 관련, 공단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보도함.
- 정부는 8일 북측에 검역장비(열감지 카메라)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는 9일 법인장 회의를 열고 북한 근로자 마스크 지급 문제를 협의하고 개성공단에도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이 있지만, 현지 조달은 불가능하므로 남한 지역에서 완제품을 들여온 이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러 잠수함과 北 어선 및 경비정 충돌’ 보도 등 관련 재차 ‘황당무계한 모략보도’라고 주장하며 ‘날로 극악하게 감행되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의 주범은 박OO패당’이라고 비난 및 ‘진정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처신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6.1, 중앙통신)
- 국제여성대행진대표단의 경의선 육로이용 관련 ‘판문점 통과 활동 방해 및 중북행사, 반미·친북성향으로 시비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세계 인류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 거래의 한결같은 염원에 칼질을 하는 범죄적 망동’이라고 비난(6.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現 남북관계의 파국은 ‘괴뢰패당이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우리 정부에 책임전가하고 ‘괴뢰패당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수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6.2, 중앙통신·노동신문)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관련 ‘파쇼독재통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교활한 술책’이라며 ‘개혁의 미명하에 독재적인 국정운영으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6.2, 노동신문)
- 한미연합대장전훈련(5.30~6.3) 관련 연합뉴스·MBC방송을 인용·보도하며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수중도발을 떠들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잠수함 탐색과 식별·공방전·대잠수함 폭탄 및 폭뢰투하를 비롯한 공격훈련에 돌아치고 있다’고 비난(6.2, 중앙통신·중앙방송)
- 現 남북관계 긴장상태는 “남조선의 악랄한 체제대결책동(북핵불용 및 북인권문제 제기·전단지 살포 등)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책임 전가 및 대통령의 ‘연방제통일방안 외면, 체제통일 추구’ 비난(6.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6월중 ‘북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추진을 “흡수통일 야망실현 목적”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우리(北)를 압살하려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연일 비난 반발(6.3,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북관계 관련 ‘현 괴뢰집권세력도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외세의존, 사대매국의 길로 질주하여 오늘과 같은 불신과 대결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전가 및 반정부 투쟁’ 선동(6.4, 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부 장관의 ‘통일경제 국제심포지엄(5.27 프레스센터)’ 격려사(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 등)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을 넘겨씌우고 反北 대결책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술책’이라고 비난(6.6,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정부의 對北 국제공조 일환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과 침략적인 대외전략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강압과 굴종, 지배와 예속의 동맹”으로 “자멸의 함정”이라고 비난(6.6,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에서 ‘심한 가뭄현상 지속 및 강화도 북부지역 농촌 등 피해확대’, KBS·MBC 방송인용 보도(6.6, 중앙통신)
- 【「조평통」 대변인 담화(6.6)】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의 對北발언(북핵 및 미사일과 대화의 장에 나올 것 등) 관련 ‘첨단핵장비들은 물론 세균무기까지 끌어들이고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박○○패당이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날강도적 궤변’이라며 실명거론 원색 비난(6.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北, 대화에 조건없이 호응’ 주장 관련 ‘긴장상태의 조선반도 정세는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괴뢰패당에게 있다’며 ‘기만적인 대화타령만 외우지 말고 대화분위기 마련을 위한 실제적 행동에 나설 것’을 재차 주장(6.7,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 “한미 연합훈련은 핵전쟁게임…안보리가 다뤄야”(6/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1일(현지시간) 유엔 웹사이트에 실린 문서를 인용 북한 유엔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지난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리더십을 제거하기 위해 최신 전략핵무기 공격 수단을 총동원한 실제 핵전쟁 게임이었다”고 비난하며 최근 북한 잠수함에서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도 합법적인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만 문제로 삼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을 다룰 긴급회의를 개최하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도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 아니다”(6/2, 노동신문, 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일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이 저들은 국제법마저 짓밟고 우주무기들을 제멋대로 쏘아리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우리를 범죄시하고 있다”고 비난 하고 “어떤 나라의 우주군사화 책동은 묵인되고 어떤 나라의 평화적인 우주개발 활동은 문제시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 공군이 최근 무인 우주비행선 ‘X-37B’를 발사한 것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우주군사화 책동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을 몰아오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미국이 우주를 세계제패를 위한 전쟁마당으로 전변(변화)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별세계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을 팔짱을 끼고 앉아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북한, 미국과 한 테이블 못 앉아…6자회담 거부”(6/2, dpa통신)
  - dpa통신은 북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 1일 평양을 찾은 독·한의원친선협회 의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원을 만나 “미국과 더는 한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궁 부상이 “미국의 의도는 우리를 협박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라는 북한의 판단 근거를 덧붙였다고 전함.
- 미국 상원 ‘재미 북한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발의(6/5, 연합뉴스)
  -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S.RES.190)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북한 “신형 인공위성 개발 중” 주장…미국 “유엔 결의위반”(6/5, 연합뉴스)
  - 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백창호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부 부국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가진 APTV와의 인터뷰에서 “신형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며 “완성되면 발사하기 전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에 알릴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미 국무부 “제3국 통한 북한 위성 발사, 유엔결의 위반 아냐”(6/6, 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 “북한, 영변 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 운영 추정”(6/7, 연합뉴스)
  - 6일(현지시간)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군축·비확산 조약 이행’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영변 이외에)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clear likelihood)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LWR)에 주목하며 “만일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북한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발전의 원천을 제공하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데 잠재적으로 이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의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무부는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화답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보여준 지속적인 핵활동과 성명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준수할 뜻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함.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북일, 5월 하순 베이징서 일본인 납북자 비공식 협의”(6/7, 요미우리신문)
  - 북일 외교 당국자가 지난 5월 하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베이징에서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함.
  - 북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비공식 협의는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5월 24~26일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짐.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UN 北 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지속 비난하며 ‘불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체제통일 망상도, 불순한 정치적 야욕도 UN 北인권사무소와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위협(6.1,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전범기업체들(군수품생산업체)이 무기시장 진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관련 ‘무기수출 3원칙의 통제선을 허물어놓은 결과’라며 ‘군사대국화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 군국주의 일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 표명(6.1,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 의결 관련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일본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위협(6.2,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5월 28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5.20,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5.20)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5/365호'로 배포(6.2, 중앙통신)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6.1)】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 관련 '미국과 이를 비호 두둔하는 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을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낙인'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반정부투쟁' 선동(6.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경찰은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 혐의로 지난달 12일 체포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 허정도(50) 씨, 조선총련 산하 기업 '조선특산물판매' 김용작(70)사장 등을 구속기소함(6.3, 교도통신)
- 北 「국방委」 대변인 성명(6.3),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을 "미국의 세균전 흉계"라고 비난 및 우리 정부의 '미국에 항변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족을 혈뜯고 있다'고 '反美 투쟁' 선동(6.3, 중앙통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6.4)】 주한미군 '탄저균' 오배송 관련 '우리(北)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생화학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 및 '미국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말살행위'라고 비난(6.4, 중앙통신)
- UN 北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며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및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 위협(6.4, 중앙통신)
- 나토 의장의 '나토 확대'발언(나토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 관련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미국의 심상찮은 나토확대와 아시아판 나토 조작책동(韓美日 3각군사동맹을 확대하면 아시아판 나토를 쉽게 창설할 수 있다)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6.7, 중앙통신·노동신문)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군부대 산하 종자연구농장 시찰(6/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종자연구농장인 제810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농장을 둘러보고 “사회주의 농촌의 자랑스러운 풍경”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장군님(김정일)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졌고 나 자신도 제일로 관심을 돌리는 당중앙의 시험농장”이라며 치켜세우며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온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통신은 3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농장 근로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으며 수행원으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조남진,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을 거론함.
- 북한 김정은, 국제아동절 맞아 원산 고아원 시찰(6/2,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김정은 동지의 친어버이 사랑 속에서 부모 없는 어린이들의 희한한 궁전으로 일떠선 원산 육아원, 애육원이 준공의 날을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셨다”고 2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1일 완공된 고아원을 둘러보고서 “원아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모든 요소요소를 흠잡을 데 없이 꾸려놓았다”며 특히 300석 규모의 애육원 식당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창조물”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아원 방문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함.
- 김정은, 원산고아원 완공 기념사진 촬영…김여정도 참석(6/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강원도 원산 고아원 완공을 치하하며 군인 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여정과 함께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안동윤 당 부부장을 수행원으로 거론함.
- 북한, ‘미국 영상 도용 망신’ 후 SLBM 동영상 또 공개(6/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4~5월 활동을 담은 새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공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난달 8일 SLBM 시험발사 참관 당시의 영상을 방영함.

-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소형 군함을 타고 해상으로 나아가 잠수함이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장면과 해수면에서 '북극성-1'이라고 쓰인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봄.
- 이 영상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사 성공 후 “멋있어. 성공이야. 대단하오”라고 성공을 치하했다고 소개함.

■ 북한TV, 김정은 '격노'한 자라공장 시찰영상 공개(6/5,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 시찰에서 '격노'한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 기록영화를 조선중앙TV가 5일 공개함.
-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김 제1위원장의 5월 산업 부문 활동을 다룬 새 기록영화 '김정은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를 방영하며 20분 분량의 영상에 김 제1위원장의 지난달 19일 자라양식 공장 시찰 모습을 담음.
- 영상에는 여자 아나운서의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이 덧입혀져 있고 김 제1위원장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육성은 담겨 있지 않아 말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김 제1위원장의 '분노'는 표정과 몸짓에서 고스란히 드러남.

■ 북한 김정은, 농약연구소 시찰...“과학자들 업어주고 싶다”(6/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10부대 산하 농약연구소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은 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생물 농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기관으로, 부지 면적은 4만9천200여㎡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연구원을 둘러본 뒤 “과학자들을 업어주고 싶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겨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냄.
-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박동규 육군 소장이 현장에서 맞이함.

■ 북한 김정은, 고아들에게 선물...“혁명의 계승자”(6/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고아원인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육아원과 애육원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문화용품들, 식료품을 보냈다”며 전달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고 전함.
  - 연설자는 “선물에는 원아들 모두를 선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려는 높으신 뜻이 깃들어 있으며 보육과 교육 교양을 책임적으로 잘 할 것을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다”고 말함.
  - 이어 최송란 평양애육원 원장, 박현숙 평양육아원 초급당비서 등이 참가한 결의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교수교양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보건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며, 설비를 잘 관리하고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함.
- 북한, 김정은 20살 나이 ‘현지시찰’ 기록 첫공개(6/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7일 ‘김정은 인민군대 사업 현지지도 주체104(2015) 4-5’라는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신창양어장 현지지도 하는 모습을 방영함.
  - 이 영상에 등장한 대형 비석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4월19일 방문했다는 사실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04년 7월11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음.
  -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버이수령의 영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양어장을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꾸리고 양어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여 군인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고도 소개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후임에 박영식 임명된 듯(6/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4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라는 제목의 새 기록영화에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이후 대장으로 진급한 박영식이 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 산하 종합양묘장 건설현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방영함.

- '김정은 경호부대 책임자' 윤정린 대장 계급 복귀(6/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4일 방영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됐던 경호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훈련일꾼대회 기념사진 촬영 장면에서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등장한 모습을 방영함.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미래의 주인공' 소년단 사상교육 강조(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3면에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미래의 주인공', '강성조선의 기동감', '주체혁명의 계승자' 등의 표현을 쓰며 소년단 창립을 경축함.
  - 신문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 근위대가 돼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며 충성을 역설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 1일故 김윤 빈소에 화환 전달(6.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6월 1일 독일조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6.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중앙은행대표단(단장: 김천균 총재), 6월 1일 제24차 국제은행대회(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참가차 평양 출발(6.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직업총동맹대표단(단장: 김동선 「직총」 중앙위 부위원장), 6월 1일 세계직업연맹 위원장이사회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차 평양 출발(6.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인민군 군악단(인솔: 남철 대좌), 6월 1일 제4차 국제군악축전(러시아) ‘아무르강의 물결’ 참가 후 귀환(6.1, 중앙통신·중앙방송)
- 독일조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 6월 1일 귀국(6.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함경남도의 화학·기계공업·수산부문 등 여러 부문사업 현지요해(6.2, 중앙통신)
- 이탈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안토니오 라치) 일행, 6월 1일 해당 부문일꾼을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하고 6월 2일 귀국(6.2,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 3일 쿠바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에게 ‘생일 축전’ 발송(6.3, 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역사학자들의 ‘공개서한 발표(5.6,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지 말고 과거잘못 인정 촉구)’ 등 거론하며 ‘일본이 계속 역사왜곡·부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파멸만 초래한다’고 경고(6.3, 중앙통신·노동신문)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김일석), 6월 3일 평양 도착 및 김일성·김정일 동상(만수대창작사) 참배(6.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대표단(단장: 박명국 외무성 부상), 6월 4일 아세안지역연단 고위일꾼회의(말레이시아) 참가차 평양 출발(6.4,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6월 4일 駐北 미얀마 대사와 담화(6.4, 중앙통신)
-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김룡권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장), 6월 4일 평양 도착(6.4,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노간부대표단(단장: 박종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 고문), 6월 4일 평양 출발(6.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평양생물기술연구원 현지지도(6.6,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 김룡권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장), 6월 5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6.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 요해 및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도 방문(6.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소년단 창립(6.6)」 69주년 즈음 김정은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육아원·애육원 건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조선소년단전국연합단체대회 등)” 칭송(6.6,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영남, 6월 6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의 화재 등에 의한 인명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6.7,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전력난 극복하자”…북한, 태양열 발전 독려(6/5, 노동신문,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로이터통신)
  -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연에너지 이용을 독려하고 “자연 에너지를 개발해 이용하는 것은 나라의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려는 당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평양방송은 ‘수십 개 빛 전지판’을 설치해 사무실 조명을 켜는 황해북도 체신관리국과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양수 동력 설비를 돌리는 버섯공장을 ‘모범사례’로 소개함.
  - 조선중앙통신은 ‘태양열을 이용한 살림집 난방기술’을 선보이며 주택 벽에 ‘산화철 흑색 칠감’을 발라 태양빛을 잘 흡수하게 하고 거품시멘트 보온재를 사용하면 겨울철 방 안 온도를 15~18도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함.
  -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북한 여행을 알선하는 고려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가정집 창문에서 목격되는 태양광 패널이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전하며 북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20와트짜리 태양광 패널이 35만원(암시장 환율로 약 44달러) 정도에 팔린다고 보도함.

### 나. 주요 조치

- 북한, 백두산 관광지 개발 ‘시동’…교통·전력인프라 마련(6/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5일 북한의 혜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길 건설 착공식이 지난 4일 삼지연대기념비 앞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삼지연지구 철길 건설”이라고 언급함.

## 다. 경제 상황

- “북한, 외국인들에 카드결제 강요하며 폭리 챙겨”(6/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카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북한 돈 환전을 거부하며 현금결제카드인 ‘나래카드’에 의화를 입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정부·학계 전문가들 인니 방문…경제개발경험 학습(6/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캐나다-북한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KPP)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북한 경제학습 고찰단은 북한 내각 대외경제성·재정성·외무성 등 정부 관계자와, 조선경제개발협회 회장,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교수진, UBC 교수 등 모두 14명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 개발 현장 견학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전략과 경험 등을 배울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학자, 경제 관료들과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76억1천만달러…전년비 3.7%↑(6/5, 연합뉴스)
  - 5일 코트라가 내놓은 ‘2014년도 북한 대외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수출 31억6천만달러, 수입 44억5천만달러로 대외 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76억1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주요 수출품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8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2%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을 유지했고 의류 및 부속품 수출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6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밖에 철광(3억3천만달러, 18.3% 감소), 어류 및 갑각류(1억4천만달러, 21.9% 증가), 철강(1억3억천만달러, 22%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7억5천만달러, 4.7% 감소), 전기기기(4억3천만달러,

54.8% 증가), 보일러 및 기계류(3억3천만달러, 3.3% 증가), 차량 및 부품 (2억3천만달러, 9.6% 감소), 플라스틱 및 그 제품(2억달러, 31.8% 증가) 등을 나타냈으며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3년 89.1%에서 지난해 90.1%로 소폭 상승했으며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했으며 미국도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의료장비, 의약품 등 구호물자 원조에 그쳤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프랑스,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5억원 지원(6/5, 미국의소리)

- 프랑스 정부가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45만달러(약 5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프리미어 어전스’가 북한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우유, 요구르트, 빵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에 45만달러를 지원함.

■ 지린성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北무봉관광특구 공동개발(6/3, 연변일보)

- 3일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는 지린(吉林)성 조선족자치주 남부의 백두산과 맞닿은 허룽시가 무봉노동지구역의 관광특구개발에 발맞춰 북한 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해 상호호혜 원칙에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허룽시는 무봉특구가 이미 중국-북한 협력사업이 진행 중인 백두산 동쪽 비탈의 관광로 개발현장과 인접해 관광자원의 종합적 이용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담당 부서에서 실무를 추진하며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벌여 중국광성투자회사를 무봉특구 개발에 참여시켰다고 전함.

- 北,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 진행(6.1, 중앙방송)
- 원산육아원·애육원 준공식, 6월 1일 최룡해·최태복(당중앙위 비서/준공사)·한상준(강원도 인민위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6.2, 중앙통신)
- 수산성·철도성·석탄공업성·식료일용공업성(118%)·기계공업성(162%) 및 채취공업부문(광물생산, 109%)·대동강축전기공장(164%) 등 “5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 보도(6.3, 중앙방송)

- 北, 가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전국적인 ‘벼 모내기실적’이 현재 77%계선에 들어섰다고 보도(6.4, 중앙통신)
-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5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6.5, 중앙방송)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어린이날 ‘국제아동절’ 맞아…김정은 사랑 부각(6/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3~6면 곳곳에 ‘위대한 사랑 속에 나라의 왕으로 부림없이 자란다’는 제목의 글과 고아원인 평양애육원·육아원 소개 등 국제아동절 관련 기사를 다루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난해 국제아동절 평양애육원 시찰 소식과 옥류아동전문병원 건설장 시찰 소식 등을 다시 전하며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열렬한 후대 사랑”이라고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은 사회주의 보육 체제를 자랑하면서 “온 나라 거리와 마을마다 축복받은 우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어린이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 속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뛰놀며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도 주북 시리아대사의 부인 이지스 사이드의 수기를 통해 “진정한 인권을 알려거든 어린이 천국인 조선에 와보라”고 선전함.

■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없다…교화소만 존재할 뿐”(6/3, 민족통신)

- 민족통신은 3일 통신의 노길남 대표와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 김 걸 상좌, 대외사업국 부국장 정영권 상좌, 교화국 지도원(말단 직책) 김성일 중좌의 특별대담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민족통신 방송인 민족TV와 유튜브로 공개함.
- 북한 교화국 당국자들은 인터뷰에서 교화소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 세면장과 화장실,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돼 있다고 선전하고, 점심식사 후 낮잠시간도 주고 오후 6시 작업이 끝나면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시간도 준다고 하며 “폭력을 가한다든지 밥도 안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며 “정기검진과 목욕, 세탁, 소독을 철칙으로 해왔다”고 강변함.
- 이들은 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후반 33명의 고아를 키워내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서혜숙, 역시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7·2 탄광 차광수 청년돌격대장 유승남도 모두 교화소에서 개조돼 영웅이 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함.

■ 북한, 가뭄 전국으로 확산…식량생산 ‘빨간불’(6/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에서 올해에도 가뭄(가뭄)현상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에 100년 내 가장 심한 왕가뭄이 든 데 이어 올해에도 조선의 전반적 지방에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함.
- 지역별 강수량은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양강도, 강원도가 80~151mm로 평년의 53~67%에 그쳐 북한 내 가뭄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통신은 전함.
- 통신은 “연백벌, 재령벌 등 주요 들판에서의 평균 강수량도 매우 부족해 이미

과중한 주요 작물과 벼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가뭄이 지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 이틀째 ‘먹통’(6/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웹사이트 류경·조선의오늘 등 주요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3일 오후 6시 부터 17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다만 노동신문,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공식 도메인(.kp)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친북매체 웹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하다고 전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접속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세계 금연의 날’ 행사, 6월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6.1, 중앙통신)
- 보천보햇불상 체육경기대회(평양·혜산·함흥 등에서 축구·농구 등 30여개 종목 진행), 6월 3일 혜산경기장에서 개막(6.3, 중앙통신·중앙방송)
- 삼지연지구 철길건설착공식, 6월 4일 ‘오수용’(黨 비서,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삼지연대기념비 앞에서 진행(6.4, 중앙통신)
- 제2차 전국 소년축구경기대회 폐막식, 6월 4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운동장에서 진행(6.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평양시 內 문수물놀이장 등 야외 물놀이장 개장 보도(6.5,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6자회담 재개 북한에 달려…비핵화 조치 취해야”(6/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밝힘.
  - 미 국무부 하프 수석고문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은 최근 반대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하프 수석고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북 제재강화에 반대할 경우의 대책 에, “우리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함.
  
- 미국, “북한, 영변 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 운영 추정”(6/7, 연합뉴스)
  - 미 국무부와 의회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군축·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영변 이외에)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clear likelihood)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음.
  -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LWR)에 주목하며 “만일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북한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발전의 원천을 제공하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데 잠재적으로 이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의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부는 또한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하고, 공격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함.

## 나. 미·북 관계

- ‘핵탄두 탑재 北 ICBM 무력화’ 미 요격미사일 망에 구멍(6/1, 연합뉴스)
  - 미국이 핵탄두 탑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에 배치한 33기의 요격 미사일에 두 개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됨.
  - 3단계로 이뤄진 이 요격 미사일은 지상 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망(GMD)의 핵심으로, 지하 격납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적 미사일 공격 시 모습을 드러내며, 각 미사일에는 탄두 부분에 해당하는 ‘킬 비히클(kill vehicle)’이 장착됨.
  - 조사 결과 미사일 유도 체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배선 봉치(wiring harness)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습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 격납고에 보관 중인 미사일이 부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짐.
  
- 북한, 미국과 한 테이블 못 앉아…6자회담 거부(6/2, 연합뉴스)
  - 북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1일 평양을 찾은 독·한의원친선협회 의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원을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 통신이 보도함.
  - 궁 부상은 “미국의 의도는 우리를 협박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 근거를 덧붙였음.
  - 한편,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다른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독일과 북한 관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의회, 대북 원조·경제지원 계속 금지(6/6,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음.
  - 국무부의 경우 해외 빈곤국에 지원하는 예산인 ‘경제원조기금’에서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도 대북 지원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명시함.
  - 외교소식통은 “제작년과 작년에 이어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회 내부의 기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음.

## 다. 중·북 관계

- 지린성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北무봉관광특구 공동개발(6/3, 연합뉴스)
  -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시는 무봉노동지구역의 관광특구개발에 발맞춰 북한 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해 상호호혜 원칙에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함.
  - 개발에 참여한 광성투자회사는 무봉지구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에 착수했으며,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육상 관광을 시작할 계획임.

## 라. 일·북 관계

- 北, 조선총련측에 재일조선인 첨단 기술자 접촉 지시(6/2,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아들인 허정도(50) 씨 자택에서 ‘첨단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재일 조선인 기술자와 접촉하라’는 북한의 지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경찰이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 혐의로 지난달 체포한 허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며, 2013~2014년 초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경찰은 조선총련이 기술자 회유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본 기술을 유출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임.
- 북일, 5월 하순 베이징서 일본인 납북자 비공식 협의(6/7, 연합뉴스)
  - 북일 외교 당국자가 지난 5월 하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베이징에서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음.
  - 북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비공식 협의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5월 24~26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음.
  - 일본 측은 협의에서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 종료 시점인 7월이 곧 다가오고 있어 조사 내용의 신속한 보고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두드러진 진전이 없어 공식 협의를 재개될 전망은 아직 없는 상태임.

- 북한은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사건과 관련, 허종만 재일조선총련 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것에 반발해 “정부간 대화도 불가능해졌다”고 일본 측에 통지했으며, 이번 비공식 협의는 북한의 이러한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면하 대일 교섭 창구는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도 김정은 2차 대전 승전행사 불참 이유 몰라(6/4, 연합뉴스)
  - 러시아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북한 특사가 김 제1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확인했으면서도 오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함.
  - 이 소식통은 “러시아 측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며 누구도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해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 러시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러 경제협력 걸림돌”(6/6,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을 제외하면 협력 사업이 가능한 통로가 매우 좁다며 북한이 대북 제재를 벗어나려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말함.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루블화를 양국 간 교역의 결제 통화로 이용하는 등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역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6/2,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 기존의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 조항엔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이 조항에 거론된 ‘핵무장국’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NPT상으로 북한은 ‘핵비보유국’로 간주되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핵무장국’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미군, “북한과 관계개선때 유해발굴 첫 임무”(6/2, 연합뉴스)
  -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그레이 쇼우 미국 전쟁포로·실종자(POW/MIA) 담당국 지역조정관이 밝혔음.
  -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2005년 미국 발굴팀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중단했으며, 2011년 북한과의 합의로 재개했으나 이듬해 3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로 또다시 중단한 바 있음.

-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기간 약 8천명에 달하는 미군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유해발굴팀에 따르면 장진호 부근 평양 북쪽 60마일 일대에 5천500구에 달하는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北 억지력 강화’ 한미 연합사단 공식 출범(6/3, 연합뉴스)
  - 한미 양국군의 첫 혼성 사단인 한미 연합사단이 의정부 미군 부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3일 공식 출범했음.
  - 미 2사단을 모체로 만들어진 한미 연합사단은 세계적으로 2개국 혼성 사단의 첫 사례로, 평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행태로 운영되다가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기계화보병여단으로 편성됨.
  - 한미 양국은 평시에도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위협을 억지하고자 작년 7월 연합사단 창설에 합의했음.
- 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 “한국,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 높여야”(6/4,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 시도를 비판할 정도로 이번 사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아·태 지역 핵심 동맹으로서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번 사안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주요 현안을 고리로 한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 정부, “美남중국해 언급, 우리에게 새 역할 요구 아니다”(6/4,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니얼 러셀 차관보의 언급과 관련해 “일반론적 차원의 견해 표명”이라면서 논란 확산을 경계했음.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러셀 차관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의제 가능성 등 한미 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우리 정부에게 이런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대미 공공외교 예산, 일본의 8분의 1 수준(6/7, 연합뉴스)

-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 예산이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한일 외교전의 주무대인 미국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는데 쓰이는 외교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일본이 민·관을 통틀어 대미 공공외교에 쓰는 예산은 최소 1천70만 달러(한화 약 119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공공외교 전담조직인 국제교류재단 워싱턴사무소의 연간 예산은 일본의 8분의 1 수준인 15억원에 불과함.
- 일본의 이 같은 ‘투자’는 미국 조야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을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FTA 정식서명에 친서교환…“역사적 이정표”(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하고 가오 부장으로 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우리 측 친서 역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함.
- 시 주석은 친서에서 한중FTA가 “양자 간 통상 관계의 새로운 비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박 대통령은 이번 FTA는 양국에 폭넓은 이익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함.

- 中, “정의 목소리 들어야”…박근혜 대통령 대일메시지 지지(6/2,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발언 평가 요구에 “우리는 일본정부와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 “(일본의) 역대 내각이 침략역사에 대해 정식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반성했던 정중한 태도와 약속을 지키고,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에 역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실제 행동으로써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다. 한·일 관계

- 박근혜 대통령, “日 역사인식 중요…아베담화 기회 잘 살려야”(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서 열린 한일현인회의(韓日賢人會議)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한일 우호 관계를 지탱해온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 등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종전 70주년인 올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8·15 담화(아베담화) 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건강한 바탕 위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위안부 관련한 일본의 결단, 양국의 입장 차이는 대화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함.
  - 모리 전 총리는 “아베 총리도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라야마·고노 담화에 기초해 행동하고 있음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함.
- 한일 국방정보본부 2년 만에 교류…北 정세 논의(6/2,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 본부장의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 국방정보본부간 회의는 연례적인 것으로, 1971년부터 61차례 진행됐으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열리지 않은 데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방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함.

■ ‘日 세계유산’ 9일 분수령…한일, 서울서 2차 협의(6/6,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2차 협의회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열린 1차 협의회에 이은 후속 협의임.
- 정부는 관련 시설에서의 강제노동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그동안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으며, 타협에 실패할 경우 결정권을 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양국간 외교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 정부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등재권고안’을 고리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코모스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중국의 남중국해 공격적 행보에 딜레마 빠진 미국(6/1, 연합뉴스)

-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행보를 방관하자니 동맹국들과 멀어질 것 같고 공세적으로 나서자니 신냉전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동맹국들 앞에서 중국의 기세를 막아낸 지역의 균형자를 자임했고,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역동적 시장을 보유해 세계를 양분할 수 있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게 중론임.
  - 딜레마에 빠진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성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WSJ는 시 주석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매립 영토를 증축하는 작업을 중국 굴기의 상징으로 해석함.
- 중국 국방부, “인공섬 건설, 외부간섭으로 중단되지 않아”(6/1,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인공섬 건설 조치에 대해 “외부의 간섭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보도함.
    - 제 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관유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은 중국의 도서(인공섬) 건설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혔고 주권도서 위에서의 활동이라고 부연했으며, 카터 장관이 중국 인공섬 건설에 의문을 제기 한 것은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축함.
    -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중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 中 남중국해 패권행보에 “팔꿈치 반칙 하지마라”(6/2,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청년 리더들과의 타운홀 간담회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련 국가들, 특히 중국은 현행법을 존중하고 힘에 의존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법에 의한) 접근법을 잃기 시작하면 이는 분쟁으로 번져 힘에 의한 주장이 나오기 마련이며 아시아와 태평양의 번영도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이 어떤 면에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팔꿈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인공 섬을 건설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같은 공격적 행위가 오히려 지역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필리핀·베트남, 미국·일본과 남중국해 ‘연대’ 강화(6/2,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방위 장비를 지원받아 중국에 대한 견제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임.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재임 중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해 나흘간 머물며, 특히 4일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대처를 위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이 같은 협정의 교섭 개시를 지난 달 25일 합의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 5월 각각 일본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했음.
  
- 오바마 대통령, “중국, TPP 가입 타진해왔다…결국엔 가입할 것”(6/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 서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 시장의 질서를 좌우하는 상황을 견제할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PP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TPP의 규범에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음.
  - 그는 “구속력있는 노동·환경기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관세 축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미국과 11개국이 합의한다면, 중국도 이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남중국해 관련 미국 겨냥해 “평화의 길 걸을 것”(6/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 부 차관보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평화·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협력·공영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답변했음.
  - 화 대변인은 “우리는 결코 ‘국강필패(國強必覇·국가가 강해지면 패권을 추구한다)’와 ‘승자독식’의 낡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의 국가 주권과 안보의 결연한 수호자, 국제적 공평·정의의 충실한 수호자, 세계 평화·발전의 적극적인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러셀 차관보는 최근 강연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조치 등 영토주권 강화조치가 주변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는 의심을 품게 한다”며 중국의 의도를 비판한 바 있음.
- **중해커, 美연방정부 해킹해 공무원 400만 명 정보유출(6/5, 연합뉴스)**
  -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킹을 당해 공무원 400만명 정보가 유출됐으며, 근래 발생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임.
  - 특히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중국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미 언론들이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제히 지목, 최근 잇단 정치·경제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간 갈등을 증폭할 전망이다.
  -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각 부처·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보직경력, 업무 능력 평가, 건강관련 자료 등 각종 신상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며, 미국 정부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한편,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은 대개 익명으로,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며 근원을 찾기 어렵다”며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가능성’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함.
- **주중 미국대사 티베트 방문…라싸에 영사관 설립 희망(6/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가 최근 티베트 자치구를 했으며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에 영사관을 설립하길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티베트 방문과 관광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티베트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티베트와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라싸 주재 영사관 설립을 요구해왔음.
  -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이 자국의 티베트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권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미국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강압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분신사태에 다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에 티베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바. 미·일 관계

- 아베 총리, '일본 공격할 의사 부인해도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6/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해당 시 미국 등을 공격한 국가가 일본까지 공격할 뜻을 부인하더라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해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함.
  -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은 ①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②이에 대항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③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베 정권은 이를 일본이 아닌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음.
  - 아베 총리는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종합적으로 일본에 미칠 전화(戰禍)를 판단해 대응 한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행사로써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日, 아베 총리 방미 후 美첨단무기 집중 매입…한 달 새 5조원 이상(6/3, 연합뉴스)
  -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일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힘.
  - 미 국무부는 일본과 지난달 5일 30억 달러(한화 약 3조2천억 원) 규모의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의 판매 계약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1억9천900만 달러 상당의 UGM-84L 하푼 미사일 관련 장비·부품·훈련과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는 무기판매의 결정권을 쥔 미국이 아베 총리 방미와 이를 계기로 이뤄진 방위지 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며,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미 최신에 이지스함, 일 요코스카 항 첫 배치(6/2, 연합뉴스)
  - 군사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은 미국 해군 이지스 순양함인 찬셀러스빌 호가 지난 달 28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출항,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향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음.

- 첼설러스빌호는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항공모함 강습단을 보호할 수 있는 최신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고 있으며, 해상안보 작전을 펼치거나 일본 자위대와 같은 동맹군과의 합동훈련에 투입될 예정임.
- 미 해군은 순양함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조지 워싱턴 항모 대신 성능을 개량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며,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BMD)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벤폴드, 밀리우스 호도 각각 올해, 2017년까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하기로 함.

## 사. 미·러 관계

- 미국, 대러시아 세몰이...독일서 군사대응책 논의(6/5,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미국과 유럽의 국방, 외교 관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할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중거리 핵미사일폐기 조약(INF)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언급한 적이 있음.
  - 러시아는 그동안 이러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 러시아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려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무력 대응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제 평화유지군의 자국 배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러시아가 무력 개입에 나설 경우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임.

## 아. 중·일 관계

- 중·일, 5년 만에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 재개(6/4,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베이징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5년여 만에 재개함.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5월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정상 회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한 교섭 방침을 확인했으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0년 2월을 끝으로 협의가 중단됐었음.
  - 양국은 작년 11월과 올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이후 역사 인식이나 영유권 분쟁을 놓고 대립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 아베 총리, 중국견제 전 방위 외교…호주·필리핀과 연대 박차(6/4, 연합뉴스)
  - 일본은 중국의 활발한 해양진출을 경계하는 호주, 필리핀 등 제3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압초 매립 문제를 제기할 태세임.
  - 아베 총리는 4일 오후 도쿄에서 열리는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압초 매립 등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對) 중국 공조를 염두에 둔 안보 협력을 결의했으며, ‘P3C 초계기’ 등의 수출을 염두에 둔 채 필리핀과의 방위장비 이전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음.
  -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3일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면담하면서 방위 분야 공조 강화에 뜻을 같이했으며, 일본 언론은 최근 ‘준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된 호주와의 관계강화는 단연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함.
  - 더불어 아베 총리는 7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중국의 남중국해 압초 매립 문제를 제기할 의향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중국·일본, 아시아 인프라 선점경쟁 확산일로…태국 등 이득(6/5, 연합뉴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에

맞서 일본이 아시아 신흥국에 1천100억 달러(약 120조원) 투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이 선점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고속철 건설 시장에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음.

-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미 주요 국가의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앞서고 있는데다 AIIB 흥행몰이까지 감안해보면,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이끄는 일본에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사업비용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우세함.
- 일본은 앞선 기술력과 초저금리에 따른 낮은 자금 조달 비용, 풍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험 등을 내세워 중국과 일전을 벌이고 있음.

#### ■ 중국-일본, 3년 만에 첫 재무장관 회담 개최(6/6, 연합뉴스)

-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었으며, 이번 5차 양국 재무장관 회담은 무려 3년 2개월 만에 개최된 것임.
-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게 회담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관측됐었음.
- 양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낸 공동성명에서 실리를 위해 함께 재정을 논의하고 예산, 과세,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채 관리, 관세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심화하고 아울러 금융부문 협력을 늘리면서 교역과 투자 부문 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금융부문 협력을 촉진하고 아세안(ASEAN)+3 국가들의 이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음.

### 자. 중·러 관계

#### ■ 중국-인도, 러 최신형 탱크 아르마타 구매에 관심(6/4, 연합뉴스)

-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코진 군사기술협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의 전통적 파트너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르마타 탱크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 무기는 신형으로 고가”라고 설명했다.

- 코권은 다만 신형 무기가 먼저 러시아군에 보급 후에야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전문가들은 최소 3년 뒤에야 아르마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이 탱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펼쳐진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신행 탱크로, 작동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포탄에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했으며, 3명의 승조원을 전면의 강화장갑 격실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임.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없다…교화소만 존재할 뿐”(6/3, 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부정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미국의 친북 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 대표와 형사범들을 다루는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 간의 특별대담을 마련했음.
  -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수용소 내 최악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인권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이 교화소 당국자 인터뷰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친북 인사를 앞세운 인터뷰인데다가 인터뷰 내용이 북한 찬양 일색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짐.
  - 민족통신은 3일 노 대표가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 김 결 상좌, 대외사업국 부국장 정영권 상좌, 교화국 지도원(말단 직책) 김성일 중좌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민족통신 방송인 민족TV와 유튜브로 공개했음.
  - 북한 교화국 당국자들은 인터뷰에서 교화소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 세면장과 화장실,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돼 있다고 선전했음.
  - 또 점심식사 후 낮잠시간도 주고 오후 6시 작업이 끝나면 작업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하는 시간도 준다고 하며 “폭력을 가한다든지 밥도 안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며 “정기검진과 목욕, 세탁, 소독을 철clr으로 해왔다”고 강변했음.
  - 특히 교화인들의 노동은 기본이 농업과 축산이어서 먹을 것이 항상 있다며 “밖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안준다고 하는데, 식사도 안준다고 비방하는 소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 돼지고기 같은 육류도 공급하고 명절과 기념일에는 특식도 준다고 덧붙였음.
  - 이들은 그러면서 “밖에서 알지도 못하고 중상모략하며 폭력이니, 매달아 때린다느니, 교화인 거처에 쥐가 우글거린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들으면 교화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격분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음.

■ 북, 한국드라마 본 대학생들 처벌(6/3,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특정드라마가 평양시 대학생들 속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사법당국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처벌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 평양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한 소식통은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본 학생들은 해당 초급당위원회에 자수하라는 지시가 4월 초 평양시의 모든 대학들에 내려졌다”고 이야기했음.
-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1980년대 초 북한이 처형한 영화배우 ‘우인희 사건’을 다룬 12부작의 한국드라마라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 이 드라마는 16기가 소형 메모리칩에 담겨 유포되면서 주로 손전화를 통해 많이 시청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 특히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그동안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었던 김일성 시대의 북한사회를 실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양시의 젊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속에서 급속히 확산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일각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외형상으로 많이 닮았고 행동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실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이 드라마에 더욱 열광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간부는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철도대학 학생 5명이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또 지난 4월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보았다고 당국에 자수한 평양시 대학생 30여명은 1년간의 ‘혁명화’ 처벌을 받아 주변 건설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졸업을 앞두고 자수한 학생들은 3년 동안 현장체험을 하도록 졸업장 대신 ‘수료증’만 주었다고 그는 언급했음.

■ 국제사회, 북한 정치범수용소 존재 증거 다수 확보(6/4, 미국의소리)

- 북한은 3일 미국의 친북매체인 ‘민족통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음.

-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은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북한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음.
  -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음.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음.
  - 위성사진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위치가 파악됐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임.
  - COI는 북한이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음.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14호 개천관리소, 15호 요덕관리소, 16호 명간 (화성)관리소, 25호 청진관리소 등 4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밝혔음.
  -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음.
  - 이 웹사이트는 북한 내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음.
  - 특히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살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이 감출 게 없다면 유엔을 비롯한 인권 감시단체들에 수용소를 즉각 개방해 북한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음.
- 北 “서울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수수방관 않겠다”(6/4, 뉴시스)
- 북한이 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이달 중 서울 설치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북인권사무소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괴뢰패당과 추종세력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정면으로 도전해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고 비판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한사코 훼손시키고 반공화국 고립압살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특대형정치도발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백두산총대는 서울에서 북인권사무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2. 북한 인권

- 당국자 “北인권 이제 시작…압박강화가 대화 노력”(6/1, 연합뉴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동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awareness’(경각심)를 ‘awakening’(자각)한 정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포럼, 정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NGO(비정부기구)도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겠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7일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친 바 있음.
  -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머릿속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권문제와

핵문제는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를 포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압박 이외에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화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방편으로서의 하나가 압박 강화”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실효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 더 실효적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병세, 北문제에 “인권 존중 없이 평화·안정 없어”(6/1,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인권 측면에서도 북한을 바라보기 위해 전체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한반도·동북아 상황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도 아우르는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integral part)”이라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의 이런 언급은 인권 문제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요소로 중요하게 시사한 최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동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윤 장관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임을 상기하면서 “동아시아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고도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본받아야 한다”며 “유럽의 협력과 화해는 과거 잘못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과거로부터 깨끗이 단절하고 현재에 보다 책임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朴대통령, 스위스 외교장관 접견…北비핵화·인권개선 지원요청(6/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회의’ 참석차 방한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스위스 관계 및 지역 정세, OSCE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지난 60여년간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위스 정부가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음.
  - 부르크할터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및 대북 인도지원 등의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응하도록 가능한 설득 노력을 해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국제사회, 최근 대북 인권 개선 압박 강화(6/3, 미국의소리)**
  -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의 미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음.
  -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임.
  -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 법대 교수, 북한인권 유린 고발(6/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북 일리노이 대학(Northern Illinois University)의 몰스 탄 (Morse Tan) 법대 교수는 ‘북한, 국제법, 그리고 두 가지의 위기’라는 책은 미국에서 성장한 자신이 오래 전 대학 시절 북한인권 참상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느낀 충격으로 연구를 시작해 약 10년 만에 완성됐다고 말했다.
  - 탄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사이버 공격, 핵무기 개발 등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통한 안보 위기,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북한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며 북한의 두 위기, 인권과 안보 위기를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여성 인신 매매, 종교 탄압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탄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법을 어떤 식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기본 문서들의 조사를 통해 수많은 탈북자들의 사례들을 모아 이들을 책에 수록했음.
  - 즉, 정치범 수용소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감금과 고문,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행 등이 왜 국제법의 위반인지를 설명하고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 “북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해야”(6/5, 미국의소리)
- 유럽의회 내 의원모임인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유럽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지도자 개인숭배 이외의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명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런 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런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북한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남북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 제출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밖에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과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음.
- 유럽안보협력기구 “북한 등 아시아 인권 문제 다룰 수단 필요”(6/5, 미국의소리)
-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이 함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 참석 차 한국을 방문 중인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접근법과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음.
  -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동구권의 인권 문제를 다뤘던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권 개선을 통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과 구 소련 그리고 유럽 35개국은 지난 1975년 정치와 군사, 경제, 환경 분야와 더불어 인권 분야까지 포괄하는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냉전 극복과 통합의 기반을 닦았음.

### 3. 탈북자

- 미 입국 탈북 난민 181명(6/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최근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두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음.
  -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한 것은 지난 1월 한 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후 4개월 만에 처음임.
  -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음.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난민 지위를 부여한 탈북자 수는 181명임.
  - 미국은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 2009 회계연도에 25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음.
  - 2010 회계연도에 8명으로 감소했던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2011 회계연도에 23명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20명 안팎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음.
  - 그러나 2014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의 수는 8명으로 감소했음.
  -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경계 강화와 그로 인한 탈북 증가비 급증, 게다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 강화가 겹쳐 탈북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한편,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대변인은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 이날 발표된 2015년 1/4분기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이민난민국이 심사한 탈북 난민 신청은 44건임.
  -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난민 지위를 거부했고, 나머지 26건은 신청자 스스로

심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았음.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18건의 탈북자 난민 신청을 심사해 단 한 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음.
-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를 색출하면서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한 추방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캐나다는 2007년 처음으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한 이후, 2012년 가장 많은 222명을 포함해 지난 3월말까지 총 47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했음.

■ 캐나다서 탈북자 영어교육 지원 행사(6/5,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앨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튼(Edmonton)시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에서 오는 18일 북한인권토론회 ‘북한인의 목소리(North Korean Voices)’가 열림.
- 이 행사 입장료와 기부금 등 수익금 전액은 미국인 케이스 라티그(Casey Lartigue)씨와 한국인 이은구 씨가 2013년 3월부터 운영해 온 한국 내 탈북자 영어교습 프로그램(TNKR: Teach North Korean Refugees) 지원에 사용됨.
- 이 행사는 앨버타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소말리아 난민출신 캐나다인 바쉬어 모하메드(Bashir Mohamed) 씨와 라티그 씨가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이 되면서 추진되었음.
-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책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모하메드 씨는 대학 마지막 학년을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라티그 씨의 영어교습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겠다고 자원했음.
- 라티그 씨는 모하메드 씨에게 먼저 캐나다에서 북한인권을 알리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 토론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쉐론 장(Sharon Jang) 씨와 켄 이라고만 밝힌 탈북 남성이 인터넷 화상전화로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임.

#### 4. 이산가족

- 미 의원들, 케리 국무에 “재미 북한 이산가족 상봉 노력” 촉구(6/4,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음.
  - 두 의원은 케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방 이후 70년간 수백만명의 한인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있는 상태”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이산가족들 간의 상봉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들은 케리 장관에게 “국무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보고서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해온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지난해 3월 재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H.Con.Res 91)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되자, 올해 114대 회기 들어 로이스 위원장과 함께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WFP “대북식량지원 연말까지 연장”(6/3, 자유아시아방송)
  -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진행되던 유엔 식량구호기구의 북한 내 지원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임.
  - 세계식량계획의 프랜시스 케네디 본부 대변인은 오는 12월까지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 케네디 대변인은 지난 주 세계식량계획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례 이사회가 열렸지만, 새로운 북한 지원 사업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기존의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곧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까지 북한의 8개 도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약 180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함.
  -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은 각각 약 76만 명과 80만 명으로 당초 계획의 열 명 중 네 명꼴에만 식량을 제공하는데 그쳤음.
  - 케네디 대변인은 지원의 연장 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이후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촉구했음.
  - 케네디 대변인은 대북지원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2천8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굿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3천 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식량계획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금한 액수는 3일 현재 7천 500만 달러로 목표액 1억 3천 700만 달러의 약 55% 수준임.
  
- 美 “대북 식량지원 계획 없어…요청 안 해”…美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인도주의 지원, 정치나 안보 문제와 별개”(6/3, 데일리NK)
  - 북한이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현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 계획이 없다”며 “북한 역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현재 북한은 6자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홍수·태풍 피해 복구 지원 이후 중단된 상태임.
  - 대변인실 관계자는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결정적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들었다.
  - 그는 “지원 대상이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은 그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 분배 감시요원 수를 제한해 분배 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011년, 2013년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농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미국은 지난해 이 조항을 삭제한 농업법안을 의결했다.
  -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는 2004년 약 3200억 원에서 2014년 약 540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 프랑스 정부, NGO 통해 45만 달러 대북 지원(6/5, 미국의소리)
-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45만 (453,515) 달러를 지원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3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황해남도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에 4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부터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임.
  -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었다.

-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은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음.
  - 앞서 유럽연합은 이 단체가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료 증대 사업에 미화 48만 달러를 지원했음.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도 올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음.
- 유진벨 “북한 결핵병동 4채 추가 건설 계획”(6/6, 미국의소리)
-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올 가을 북한에 결핵 병동 4채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결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일부 북한 결핵 시설에서는 환자 다섯 명이 병실 하나를 같이 나눠 쓰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진벨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손쉽게 지을 수 있는 형태의 조립식 패널 병동을 설계, 제작했음.
  - 이어 지난 4월 20일부터 3주간 북한을 방문해 평양 인근에 조립식 결핵 병동 3채를 세웠음.
  - 이 병동은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유진벨 재단은 또 지난 방북 기간 중 북한 내 12개 다제내성 결핵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전달했음.
  - 이 단체의 스티븐 린튼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봄 방북을 통해 450명의 결핵 환자가 센터에 등록됐고 3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마쳤으며 현재 재단의 프로그램에 등록돼 치료를 받는 환자수는 모두 1천200명이 넘는다”고 말했음.

## 8. 북한동향

- UN 北 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지속 비난하며 ‘불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체제통일 망상도, 불순한 정치적 야욕도 UN 北 인권사무소와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위협(6.1, 중앙통신·노동신문/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미련한 망동)
- 우리 정부의 6월중 ‘북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추진을 “흡수통일 야망실현 목적”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우리(北)를 압살하려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연일 비난 반발(6.3, 중앙통신·민주조선)
- 現 남북관계 긴장상태는 “남조선의 악랄한 체제대결책동(북핵불용 및 북인권문제 제기·전단지 살포 등)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책임 전가 및 대통령의 ‘연방제통일방안 외면, 체제통일 추구’ 비난(6.3, 중앙통신·노동신문/체제대결 망동이 빚어낸 극도의 불신과 긴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UN 北 인권사무소 서울 개설 관련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며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및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 위협(6.4, 중앙통신/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